



복합불황의 대응전략 및 한국경제 '96년 회고와 '97년 전망

이 글은 '96. 11. 4(목) 및 '96. 12. 26(목) 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조찬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김동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소장의 강연내용을 수록한 것임.

I. 복합불황의 대응전략

복합불황이란 여러 가지 불황이 겹쳤다는 의미이다. 외국에서 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 복합불황의 대응책을 제시해보겠다. 스탠포드에서 MIT로 옮겨간 폴 크루거만 교수는 한국과 같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에 따른 결과로, 경제효율이나 생산성 또는 기술 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의 4마리 龍, 그리고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선 폴 크루거만 교수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현재 한국의 불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던 아시아 경제가 재조정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경제 불황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불황의 국제적 요인

엔저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도

우리의 수출 증대는 세계경제 회복과 엔고가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금년들어 갑자기 엔저로 돌아선 이유를 분석해보면, 하버드 나이(Nye)교수가 미국 국무성의 의뢰로 연구한 “21세기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국의 역할”에 따르면 21세기 초부터 아시아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중국과 일본의 치열한 시소게임이 벌어질 것이며, 미국은 중국이 헤게모니를 잡게 두어서는 안되며,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더 이상의 군비증강은 어렵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일본은 駐日 미군의 일본측 경비부담을 늘리고, 오키나와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엔고 해소를 요구했고 그래서 “엔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일본의 해외투자는 3천8백억불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60억불이 미국 공채에 투자돼 있어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꿔주고 있다. 미국이 엔고 정책을 계속할 경우 860억달러를 회수하겠다고 협박해 엔저를 허용했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이런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격으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주요인이 엔저에

의한 수출둔화, 그리고 반도체 유회 등의 5대 주력상품의 수출부진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제 원·부자재 시세 폭등으로 우리의 수입 부담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이라크와 미국의 긴장고조 속에서, 이라크의 미사일기지가 폭격당하자 국제 원유가가 폭등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 해외 수입 수요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도 있다.

불황의 국내적 요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몇 개 품종에 輸出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總輸出의 약 70%가 이들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완제품 輸出을 늘리기 위해 원료, 원부재료, 반제품, 기계설비 등의 생산재 輸入이 증가되고 있으며, 물가 불안이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고임금, 고금리, 낮은 자기자본률, 인력난, 기술의 취약성, 고물류비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임금상승 요구를 불러오며, 임금상승은 다시 물가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물가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선거자금은 공장에 투자해 생산을 해내는 생산적 자금이 아니라 소비성 자금인 비생산적인 돈이다. 이런 돈을 각당 후보들이 수천억원씩 쓰게 될 것이다.

둘째, 노사관계 문제다. 근로자 측의 복수노조, 3자개입,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요구와 사용자측의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의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절충, 수렴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 OECD가입에 있어서도 노동관계 부분이 쟁점으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다. OECD에서는 복수노조,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개정법의 방향을 국제경

쟁력 강화 위주나,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주로 한 사회복지 차원이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김대통령의 결단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겠으나 물과 기름 같은 양자의 요구가 다 수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국제무역수지 개선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외채를 줄일 수 없다 현재 추세라면 2000년까지 적자는 계속 될 전망이다.

넷째, 대북안보의 문제이다. 대북안보문제 해결 없인 한국경제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일본에 있을 때 남북한을 취재한 일본 기자들의 기고를 본 적이 있는데 남한의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은 모두 북한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한총련, 노동쟁의, 정치불안으로 남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 서로가 서로를 망한다고 보는 기막힌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대응전략

가. Restructuring 전략

업종, 제품, 생산라인, 인사, 조직 등을 환경변화에 맞게끔 재구축, 재편성하는 것을 리스트럭처링한다고 말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본업회귀”가 나타나고 있다. 논노와 삼익악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논노의 경우 한국 제일의 의류메이커였는데 건설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해서, 삼익악기의 경우 경험이 전무한 가구업체로 업종을 넓히면서 부도를 냈다. 업종다각화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본업과 연관된 것이 아닌 생소한 분야로 할 경우 본업까지 망하는 위험부담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감량경영을 할 때 직접부분은 손대지 말고 간접부분에만 적용해야 한다. 조기명예 퇴직제도는 실패했다. 이를 시행하자 나가 주길 바란 사람이 남고, 남아 있어야 할 사람이

나가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언제 “퇴직” 할 지 몰라 회사에 “불안, 공포감”만 조성되고 있다. 원가절감에 있어서도 제품의 질을 무시하는 원가절감은 지양되어야 하고, 원가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나. Reengineering 전략

업무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통폐합, 단축하여 시간, 비용, 인력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의 극대화 전략이 리엔지니어링이다. 이의 좋은 성공사례가 스칸디나비아항공사(SAS)다. SAS가 엄청난 적자로 허덕이고 있을 때 칼슨 회장이 취임했다. 칼슨 회장은 천대받고 있던 최일선 영업분야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판매 목표와 이익목표 달성시 특진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으며, 총무, 인사, 경리, 기획조정실 등의 간접부문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 결과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리엔지니어링은 현장중시 경영으로 해야 한다. 현장인 최일선의 전투사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후방의 병참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최전방에 보급이 안되며 패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동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I. 한국경제 '96년 회고와 '97년 전망

'96년 경제의 회고

'96년의 한국경제는 '95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최소한 '97년상반기 까지 이어지는 경기하락국면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분기별로 계속 하락을 보였지만, 물가 상승압박은 계속 강했으며 경상수지적자는 역사상 최고수준인 220억달러

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과거 호황기때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과거 경기하락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경기 하락기로서는 지나치게 경제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실업률을 낮추었기 때문에 경기조정부담이 주로 국제수지적자로 나타났다. 또 경제주체별로 부담이 전혀 달랐다. 근로자계층은 임금상승률이 10%이상 유지될 만큼 높았고 고용조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세입규모증가율이 명목 GNP 상승률보다 4%P 높았기 때문에, 경기하락기에 필요한 부담은 모두 기업계로 몰렸다. 기업계는 경기하락기에 걸맞지 않은 임금인상, 이자율유지, 세금인상의 부담을 안았기 때문에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전년보다 1/2이하로 떨어졌고 80년대 전반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부담은 컸었다. 건설업과 유통업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두자리수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경제구조가 안정성과 대외편중성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은 계속 별로 없었다. 총외채는 1,000억달러수준으로 올라 갔고 (순외채는 360억달러로 추정) 핵심부품·소재·기술·기계의 수입 의존도는 높았으며, 몇 개 품목과 지역에 집중 의존하는 수출구조는 많은 충격을 한국경제에 불러왔다.

반도체·철강·석유화학제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졌고, 선진국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한편 한국경제의 개방도는 한결 높아지면서 국내제도가 국제규범과 일치되는 정도가 향상되었는데 그만큼 각계 각층의 적응노력도 필요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강화의 긴급성때문에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했고 정부도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시정,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촉진과 경영효율성제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SOC에의

민간자본유치 등 핵심사항의 실천에는 실패를 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한 해로서 기록되었다. 국민경제의 적응력 결핍이 두드러진 이유는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 저하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산업구조의 경직성에도 연유하고, 생산요소시장에서의 비경쟁체질도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성장의 내용도 과거에 비해 나쁜 편이었다. 내수주도의 성장하에서도 소비가 투자보다, 투자 중에서는 건설투자가 설비투자보다 왕성했던 까닭에 국제수지적자와 물가상승을 필요이상으로 유발시켰고 미래경제운영의 폭을 좁히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96년은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격차가 심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7% 가까운 수준이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경기하락감을 크게 느꼈다. 기업들의 경우는 채산성이 극히 나빠지고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특히 수출산업의 경우에는 주요공산품의 국제가격은 하락하는 가운데 국제원자재가격은 강세를 보여 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소비가 경상수지적자의 주범으로 간주될 정도로 너무 왕성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국산품은 팔리지 않아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체는 추위를 타야만 했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초적 소비보다는 교양 오락비나 외식비·관광 등 선택적 소비수요가 많아졌는데 이들 가격의 상승률이 가파랐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나지 않았다는 감을 갖게 만들었다.

몇 가지 수치상 특징도 기억해 둘만 하다.

과거 수십년간 온 국민이 경제발전에 노력한 결과, 96년에 드디어 OECD라는 선진국클럽에 가입한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만 하지만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는 역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할 만큼 외형위주의 경제운영이 지속되었다. 통화공급은 20% 가까운 증가율을 보여도 시장금리는 연초대비 올라가고 말았는데,

임금은 년중 10% 이상 상승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익성은 전년대비 50% 이상 떨어졌고 종합주가지수는 년중 20% 하락했다.

또 미국달러 대비 원화환율도 년중 10%, 정도 절하가 됨으로써 결국 우리화폐의 구매력은 뒷걸음치게 되었는데, 소비자물가는 5%~6%(Core inflation) 수준 오르고 세금은 15% 정도 올랐다. 국민생활의 실속은 떨어진 편이다. 경제체질이 악화된 징후는 수없이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사회차원에선 진정한 위기의식이나 개혁의지를 보이지 못했던 한 해였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했던 한 해로도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약속은 많아졌는데 능력의 고갈은 두드러졌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96년도 뿐아니라 미래의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면 「한국경제는 부정부패의 산물이었다」라는 종류의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림으로써 한국 기업인들의 의욕 저하와 외국 경쟁자들의 협상력 제고를 함께 불러왔다는 점일 것이다.

'96년은 지난 몇년간 정치논리·사회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결과가 현실로서 표출되기 시작한 한 해로서 기록될 것이다.

'97년 경제희생의 과제

내년도 경제전망은 거의 모든 예측기관들이 금년보다 나쁠 것이라는 점에서 동조를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6.5% 이내, 국제수지 적자규모는 150억달러 초가, 소비자물가상승율은 5%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경제의 안정성이 증진되며, 대외의존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경제성장율측면에선 상반기에는 계속 하강, 하반기에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모습이겠으나, 실업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질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는 93년 이래 계속된 경기회복의 결과 금년부터 1~2년간은 자연스레 경기후퇴 시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몇 년간 고생을 참으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경제운영 방식 때문이다. 또한 때마침 해외의 시장상황이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체력이 계속 약화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목을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몰두해왔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해외 시장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고, 엔화의 시세가 2~3년전 수준으로 변하니까 우리 경쟁력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도 큰 차이없이 지속될 것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할 만큼 과감한 조치를 기대할 만한 정치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설비투자증가율은 금년과 비슷할 것이고, 대중들의 소비수요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수출과 수입,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기에는 우리경제의 활력이 부족하다.

수출환경은 세계시장의 성장률과 무역신장률측면에서 금년보다 다소 나올 듯하고,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단가도 상승의 기미가 있다. 또 수입의 주종인 국제원자재가격은 금년보다 낮아질 듯하다. 그러나 약간 좋아질지도 모르는 해외환율을, 계속 나빠질 것만 같은 국내의 정치·사회·기업환경이 상쇄해 버릴 수 있다.

더구나 해외시장 상황은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믿을게 못된다. 엔화와 원화의 환율변화, 일본기업들의 가격인하 전략, 중국의 경기부양책 여부, 남북한 관계의 진전등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변수가 제법 많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간접

자본이나 기타 건설 투자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재원조달을 하기 위한 제반조치, 즉 국영기업의 민영화, 민간업자들에게 외국자본도입을 허용하는 문제, 다른 세출예산의 삭감노력 등이 성공적이어야 실현될 것이다. 이게 실현되면 될수록 물가상승압박은 강해질 것이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진다.

한편, 성장의 내용도 문제이다. 수출보다는 내수 특히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간주도경제의 힘은 쇠퇴할 것이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민간기업보다는 국영기업의 입장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관심거리는 3대 거시정책목표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있다.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성장율을 올리는 방향의 정책을 펴면, 금년보다 더 심한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누적, 물가불안은 필연코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OECD에 가입을 앞더라도 선진국들의 압력 때문에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확대를 가속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우리나라에는 물가불안 고금리·고임금·높은 공공서비스요금·많은 세금만큼 위험한 게 없다. 사회혼란이 동반될 정도로 아주 어려워지고, 경제체질의 악화로 이르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경제가 「자생적 회복력」을 잃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국민이 노력해야 한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문제를 누가 일으키든지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문제를 물어왔다.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상호협력해서 생산성을 올리며, 좀더 아껴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범국민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실천되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할 일도 많다.

첫째는 예산절감과 재정흑자를 실현하는 일이고, 둘째는 규제를 완화해서 자원이 재배치되도록 하고, 셋째는 과감한 행정조직정비

와 함께 행정의 생산성을 올리는 일이며, 넷째는 노동시장·금융시장을 경쟁촉진을 위해 개혁해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금융저축을 늘리도록 세제상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고생은 달갑게 받아들여겠다는 국민이 있어야, 앞서 제시한 정책을 실천하려는 정부도 나타날 것이다.

재벌을 포함한 경제적 강자들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투명경영·기술혁

신·국제화 등 미래지향적 변신에 앞장서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농어민·근로자 등을 위시한 경제적 약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최대한 빨리, 새로운 경제구조하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습득과 지식축적·창의성발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제부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않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이한구 -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잡 판!

‘시베리아의 진주’

이 아름다운 별명의 주인공은 시베리아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바이칼 호수이다. 바이칼 호수는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담수호이기도 하다.

바이칼 호수는 길이 6백36km, 넓이는 좁은 곳은 29km부터 넓게는 81km에까지 이르며 총면적은 3만1천4백94㎡를 자랑한다. 이 웅장한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강이나 시내만도 3백여개에 달한다.

면적이 큰 만큼 수심도 깊어서 가운데로 가면 수심이 1천6백20m나 된다. 이쯤 되면 수심으로도 호수 중에서는 지구 챔피언이다. 기록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통 호수들의 역사는 기껏해야 몇 만년 정도인데 바이칼 호수가 생성된 것은 2천만~3천만 년 전이다.

그 결과 바이칼 호수의 바닥은 침전물이 6.5k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다.

바이칼 호수 수량은 지구 전체 지표수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미국에 있는 5대호 물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록보다도 더 바이칼 호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이곳이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 단층 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바닥에서 따뜻한 열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대개 바다 가운데 갈라진 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시베리아의 진주가 알고 보면 호수가 아니라 미완성의 바다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바이칼 호에는 독종개과의 물고기 30여 종이 살고 있다.